

인천의 꿈, 대한민국의 미래

2016 주요업무계획

2015. 12.

목 차 |

I. 일 반 현 황	
① 일반현황	4
② 주요현황 및 통계	5
II. 2015년 성과와 평가	
① 주요성과	8
② 평가 및 개선사항	9
III. 2016년 정책여건과 목표	
① 정책여건과 전망	11
② 정책목표	12
③ 주요사업별 지표	13
IV. 주요업무 추진계획	
[정책성과(책임) 과제]	
① 재난·안전 통합대응 체계 예·경보 시스템 구축 ...	17
[안전정책과]	
① 안전관리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 확대	20
② 재난안전 정책 및 총괄·조정기능 강화	21
③ 재난현장 중심의 대비·대응역량 강화	22

목 차 II

[재난대응복구과]

- ① 자연재난·재해 대비 대응역량 제고 24
- ② 유관기관·단체의 재난관리자원 DB확대 구축 25
- ③ 방재기상의 조기대응을 위한 기상전문가 확보 26

[재난예방과]

- ① 시민 안전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추진 28
- ② 재난 위험 시설물 안전 등급 검증제 확립 29
- ③ 드론(Drone, 무인비행장치)과 함께하는 과학적인 재난예방 ... 30

[특별사법경찰과]

- ① 먹거리 및 생활환경 안전도시 조성 32
- ② FTA 확대에 따른 특사경 활동 강화 33

[비상대책과]

- ① 접경지역 통합방위 비상대비태세 강화 3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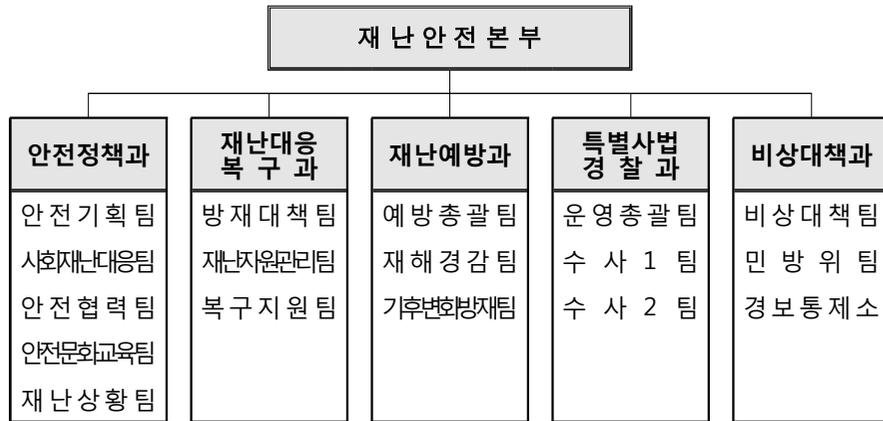
I . 일반현황

1 일반현황

기 구 : 5과 17담당

인력(정/현원) : 97/97명(일반직 95/95, 특정직 2/2)

조직표 (‘16. 1. 1. 현재)



예산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5년	2016년	내역		
			인건비	물건비	사업예산
계	11,111	17,741		941	16,800
안전정책과	1,620	2,363		347	2,016
재난대응복구과	778	9,627		29	9,598
재난예방과	2,044	2,126		58	2,068
특별사법경찰과	197	144		144	
비상대책과	6,472	3,481		363	3,118

2 주요 현황 및 통계

재난 예·경보시스템

(단위:개소)

자동음성통보시스템		강우량계	재난감시 CCTV	재해문자전광판	비고
크로샷, PEM-NDP등	마을앰프				
10	94	34	92	4	

특정관리 대상시설

(단위:개소)

구 분	시설수	중점관리대상시설			재난위험시설			
		소 계	A등급	B등급	C등급	소 계	D등급	E등급
계	4,010	3,900	1,244	2,202	454	110	108	2
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

(단위:개소)

구 분	계	중구	남구	연수구	남동구	부평구	서구	비 고
계	27	1	3	9	3	4	7	
초고층	16	-	2	5	2	-	7	50층이상
지하연계	11	1	1	4	1	4	-	1일5,000명 수용

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및 방재시설

(단위:개소)

구분	계	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	상습침수지역	급경사지	방재시설						
					지방하천	소하천 시설	배수문	저수지	배수펌프장	방조제	유수지
계	814	2	18	235	31	117	215	20	13	146	17

민방위 비상대피 시설

인구(천명)	소요량(㎡)	확보량			시설종류			
		개소	㎡	확보율	정부지원		공공	
					개소	㎡	개소	㎡
2,978	2,440,293	1,213	5,936,712	245%	185	24,932	1,028	5,911,780

민방위 경보 시설

계	경보통제시스템	방송통제시스템	일제방송시스템	경보 사이렌	주요기관 연결장치	다중경보 발령장치	서해5도 CCTV 모니터링 시스템	접경지역 군부대 등 Hot-Line
173	2식	2식	1식	141개소	4식	3식	1식	19회선

□ 위원회 현황

위원회명	설치근거	위원수(명)			위원장	기능	비고
		계	당연	위촉			
안전관리위원회	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	32	25	7	시장	인천광역시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, 시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등	안전정책과
안전문화운동추진 인천광역시협의회	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	44	8	36	시장 민간위원장	민관이 함께하는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확산·지원	안전정책과
치안협의회	인천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5	6	19	시장	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추진 및 협력사항 논의	안전정책과
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	통합방위법 제5조	35	17	18	시장	국가 중력전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·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 수립·시행	비상대책과
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	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	25	3	22	행정부시장	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 활동 운영방안 협의 평시 재난예방활동, 재난발생시 인적·물적 동원, 수습활동 전개	안전정책과
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	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9	6	3	행정부시장	기금의 운용계획, 변경사항, 결산 등 심의	재난대응복구과
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	인천광역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운영규정	21	6	15	재난안전본부장	재해복구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사업 심의	재난대응복구과
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	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	26	2	24	재난안전본부장	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사전재난 영향성검토	재난예방과
인천광역시 저수지·댐 안전관리위원회	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	11	1	10	재난안전본부장	재해위험 저수지·댐의 정비기본계획, 안전관리 등	재난예방과
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	자연재해대책법 제4조	30	1	29	재난안전본부장	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시행전에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	재난예방과

II. 2015년 성과와 평가

1 주요성과

□ 재난안전본부 출범 및 조기 안착

- 재난안전 관련, 자치법규 전면 제·개정 등 추진체계 조기 정비
 - ※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 구성운영조례 전면개정(9.30), 재난안전특별회계 조례 제정(11.16) 등
- 「재난안전상황실」을 설치하여 재난상황 24시간 실시간 관리·대응

□ 매뉴얼 정비 및 현장훈련으로 재난대응 능력 강화

-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수시 정비(30개 유형 205개)
- 재난발생 대비,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현장훈련 실시로 대응역량 강화
 - ※ 인천공항 항공기사고(5.21)·화학물질유출(10.19)·인천대교 폭설대비(12.4) 훈련 등

□ 재난안전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 확대

-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 구성(11.4) 및 안전협약(2건) 체결 등
 - ※ 에너지관련 유관기관 협약(3.25), 민·관·학 환경분야 협약체결(9.24)
- 민간전문가·지역주민 등 민관합동 안전점검·순찰 등 실시
 - ※ 안전전문 기동점검단(66명) 및 노후대형시설물 전담주치의(17명), 우리마을 안전지킴이(80명) 운영

□ 선제적 안전점검 및 조치로 재난·안전사고 예방

- 전국 최초 다중이용역세권 예·경보시스템 시범 구축 및 지하연계 복합시설물·선박 등으로 확대(16년 특교세 4억 확보)
- 국가안전대진단(2.16~4.30) 및 시기별·계절별 취약지역 수시점검 및 조치

□ 북 도발 대비 주민대피시설 확충 및 대응역량 강화

- 주민대피시설 확충(10개소), 주민 대피 매뉴얼 보완 및 훈련 실시
- 경보시설 확충(126→141개소) 및 정기·특별점검 등으로 즉응대세 유지
 - ※ 적 국지도발 주민대피·경보발령 훈련(4회), 접적지역 주민이동 훈련(4회) 등

□ 식품 및 환경 등 민생침해사범 단속으로 시민건강 보호

- 단체급식, 명절 성수식품 불법제조·공급 등 식품사범 입건(133건)
- 다이옥신 무단배출,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등 환경사범 입건(62건) 등

2 평가 및 개선사항

□ 2015년 추진 평가

- 재난안전본부 출범 직후 재난안전상황실 설치·운영 및 관련 조례 제·개정 등 추진체계 정비·보완으로 신설 조직을 조기에 안착
 -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 구성, 민간기관·단체와 협약 등 市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민관합동 안전관리체계로 전환 계기 마련
 - 북한 위협 대응, 민방위 비상대책 추진 및 특사경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년초 계획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
- 다만, 본부 출범초기로 신속한 재난 상황관리 및 초동대응 미흡 지적
 - 향후, 소방본부 등 재난안전관련 부서·유관기관 등과 정보공유·협업 강화 및 재난안전상황실 대응 능력 향상 필요

□ 향후 개선방향

- 재난안전본부의 정책·총괄 기능 강화
 - 市 중장기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「인천형 국제안전도시 조성」 계획을 수립, 안전정책 및 추진을 총괄
 - 통합관제형 「재난안전상황실」 조기 구축, 재난감시 CCTV 및 유관기관과 연계·협력, 실시간 재난상황 관리 및 대응
- 재난안전 민관 협력 강화 및 시민 역할·참여 확대
 - 모든 안전관련 기관·단체를 안전관리 주체로 참여, 역할 부여
 - 안문협 협조 및 방송매체·안전체험관 등 활용, 시민 안전교육·홍보 강화
- 재난 취약지역 집중 안전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
 - 안전대진단 기간 운영 및 취약지역 상시·선제적 안전점검 및 조치
 - 위기대응 매뉴얼 현행화 및 현장훈련 실시로 재난 대응역량 강화
- 유사시 위기대응 절차 숙달 등 비상대응 역량 제고 및 먹거리·환경 등 민생 침해사범 단속 강화

Ⅲ. 2016년 정책여건과 목표

1 정책여건과 전망

□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에 상시 노출

- 인천은 지형적 특수성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호우, 태풍·해일 등 다양한 자연재해에 상시 노출
- 특히, 도서지역인 용진·강화지역의 가뭄피해는 매년 확대되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속될 전망

□ 지역 여건상 대규모 복합·특수재난 등 발생 가능성 상존

- 지역내 국제공항·항만 입지, 대규모 공단, 각종 대형공사장 등이 산재해 있어 대형·특수재난 발생 가능성 잠재
- 재개발이외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없는 구도심 지역 노후 시설물의 위험도 누적·가중

□ 바다·섬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해양안전 강화 요구

- 최근 여객선, 낚시배 등 해양레저 관련 안전사고 증가 추세
- 市 역점시책인 「섬 관광 프로젝트」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바다와 섬을 찾는 관광객 등 해양 안전 강화 필요

□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, FTA 확대에 따라 특사경 활동 강화 요구

- 시민의 생활 및 의식수준 향상으로 풍속·먹거리 안전에 대한 기대감 상승
- 특히, 한중 FTA 발효에 따라 중국 농·수산물 수입확대가 예상되며, 市는 수입품의 통관 길목으로 원산지 단속 등 특사경 활동 강화 요구

□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 등 위기 상존

- 천안함 폭침, 연평해전 등 최근, 북한의 국지도발 대부분은 철책선이 없는 초 접경지역인 인천지역에서 발생
- 대북 화성기 설치지역인 강화도 및 서해5도 지역 국지도발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유사시 위기대응 행동절차(대피, 이동, 수용) 숙달 필요

2 정책목표

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! 인천

재난 대비·대응능력
강화로 안전도시 지원

- 1 안전관리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 확대
- 2 재난안전 정책 및 총괄·조정기능 강화
- 3 재난현장 중심의 대비·대응역량 강화

자연재해 대비·대응
역량 강화

- 1 신속한 재난 대응 역량 제고
- 2 민·관·군 공동활용체계 확대 구축

선제적 예방활동 강화로
안전 인천 구현

- 1 취약대상 시설물 재난사고 절대적 방지
- 2 시민안전의 선제적 재난예방 추진
- 3 시민중심의 맞춤형 안전 및 편의사업 지원

민생침해 불법행위 척결로
시민생활 안정 도모

- 1 먹거리 및 생활환경 안전도시 조성
- 2 FTA 확대에 따른 특사경 활동 강화

유사시 위기관리 능력강화로
비상대비태세 확립

- 1 접경지역 통합방위 비상대비체제 강화

3 주요사업별 지표

□ 총괄표

(단위 : 백만원)

시정 방침	주요 전략	추진사업명(주요과제)	신규/ 계속	사업기간	총사업비 (국비포함)	국가 지원	
시 민 중 심 시 정 실 현	재난 대비· 대응능력 강화로 안전도시 지원	- 안전관리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 확대	계속	지속	-		
		- 재난안전 정책 및 총괄·조정기능 강화	계속	지속	910		
		- 재난현장 중심의 대비·대응역량 강화	계속	지속	109	국민안전처	
			3개 시책	사업비 계		1,019	
	자연재해 대비·대응 역량 강화	- 신속한 재난 대응 역량 제고	계속	지속	760		
		- 민·관·군 재난자원 공동활용체계 확대 구축	계속	지속	-		
			2개 시책	사업비 계		760	
	선제적 예방활동 강화로 안전 인천 구현	- 취약대상 시설물 재난사고 방지	계속	지속	16		
		- 시민안전의 선제적 재난예방 추진	계속	지속	2,026	국민안전처	
		- 시민중심의 맞춤형 안전 및 편의사업 지원	계속	지속	-		
		3개 시책	사업비 계		2,042		
민생침해 불법행위 척결로 시민생활 안정 도모	- 먹거리 및 생활환경안전 도시조성	계속	지속	-			
	- FTA 확대에 따른 특사경 활동 강화	계속	지속	2			
		2개 시책	사업비 계		2		
유사시 위기관리 능력강화로 비상대비 태세 확립	- 접경지역 통합방위 비상대비체제 강화	계속	지속	3,481	국민안전처		
			1개 시책	사업비 계		3,481	

□ 세부지표

추진사업 (주요과제)	지 표	단위	2015	2016	2020
안전관리민관협력 및 시민참여 확대	○민·관·학 안전관리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	회	2	2	3
재난안전 정책 및 총괄 조정기능 강화	○재난종합상황실 운영	-	-	-	-
재난현장 중심의 대비·대응능력 강화	○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○재난대응훈련 내실 운영 ○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의무화	개 회 개소	205 2 -	209 2 171	미정 2 미정
신속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	○재난관리실태점검 ○방재훈련(겨울철 교통소통훈련) ○UN ISDR 협업추진	회 회 회	3 1 4	3 1 4	
민·관·군 재난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	○재난자원 DB구축 및 현행화 ○재해구호물자 확보	건 세트	54,896 2,346	55,558 2,346	
취약대상 시설물 재난사고 방지	○노후 시설물 안전점검 ○초고층 및 지하연계 시설물 안전점검	개소 개소	4,010 27	3,900 27	3,500 27
시민안전의 선제적 재난예방 추진	○낙뢰 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 ○상습가뭄지역 조사 및 가뭄대비 네트워크 구성·운영	개소 건	2 1	2 1	2 1
시민중심의 맞춤형 안전 편익사업 지원	○재난 취약시설 『안전점검의 날』 확대	회	12	12	12
먹거리 및 생활환경 안전도시 조성	○먹거리가 안전한 도시건설 ○환경오염 취약지역 관리강화 ○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	건 건 건	150 120 1	180 130 3	200 150 4
FTA 확대에 따른 특사경 활동 강화	○수입식품 등의 불법행위근절 ○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점 등 안전의 미지제고 ○특사경 직무분야 확대에 취약분야 강화	회 회 개소	6 1 1	8 2 3	10 2 3
접경지역 통합방위 비상대비체제 강화	○시민과 함께하는 위기대응 훈련강화 ○접경지역 민방위시설·장비 확충 ○접경지역 다중경보발령장치 구축 ○유관기관과의 협조·정보공유 ○「북한군 침투·도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」 최신화	회 개소 개소 회 회	20 10 5 10 ·	20 5 5 10 1	20 5 5 10 1

IV.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정책성과(책임) 과제

1 재난·안전 통합대응 체계 예·경보 시스템 구축

1 재난·안전 통합대응 체계 예·경보 시스템 구축

2016년도 추진목표

- ◇ 재난 발생시 각 기관(남,부평,강화,옹진) 상황실(관계서버)과 연계한 실시간 상황 전파 가능 시스템 구축
- ◇ 특히, 본 사업은 우리시 제안으로 선정된 시범사업으로, 전국 최초이며 전액 국비로 추진

□ 사업개요

○ 대상사업(5개 권역)

(단위/백만원)

기 관 별 (구축주관)	권 역 별	사 업 비 (국비)	비 고
계		600	
부 평	부평역세권	200	역세권
남 구	인천터미널 역세권	54	역세권
	주안 역세권	45	역세권
강화군	황산도항 외8개항(258척)	158	항·포구
옹진군	선진포항 외7개항(232척)	143	항·포구

○ 사업내용

- 부평·남구 역세권 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다중이용 시설, 강화·옹진 항·포구 등의 재난발생시 예·경보 통합전파시스템 구축

○ 운영체제 및 효과

- 시 스템 : 향후 민·관 상호 협업에 의한 운영 및 유지관리
- 주요기능 : 재난사항을 문자메시지 및 관리주체 방송시스템으로 전파
- 기대효과 : 유사시 통합상황전파로 인적·물적피해 최소화

□ 그간 추진실적

- 2013. 09월 (사업제안), 2014. 01월(사업선정)
- 2014. 11월 : 특별교부세(200백만원) 교부(인천시 → 부평구)
- 2015. 09월 : 특별교부세(400백만원) 교부(인천시 → 남구, 강화, 옹진)

□ 향후 추진계획

[부평역세권]

- 2016. 02월 : 사업자 확정 및 용역발주
- 2016. 06월 : 용역완료 및 시스템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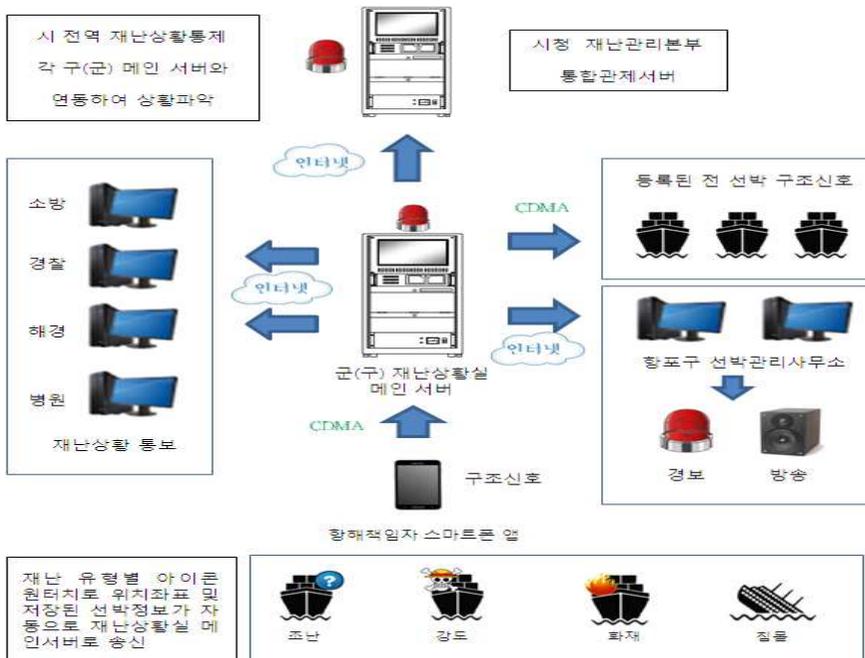
[인천터미널·주안역세권, 강화·옹진 항·포구]

- 2016. 06월 : 사업자 확정 및 용역발주
- 2016. 10월 : 용역완료 및 시스템 운영

시설현황(부평역세권)

- 점포개수 : 1,408개
- 관리주체(9) : 인천교통공사, 한국철도공사, 부평민자역사, 부평역, 부평대아, 부평중앙, 신부평, 신라빌딩, 부평일번가

<상황전파시스템 흐름도>



안전정책과

- 1 안전관리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 확대
- 2 재난안전 정책 및 총괄·조정기능 강화
- 3 재난현장 중심의 대비·대응역량 강화

1 안전관리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 확대

- ◇ 시 및 군구 등 행정기관 중심의 안전관리만으로는 한계
- ◇ 모든 재난안전 기관·단체 및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관리 추진

□ 추진내용

- 재난안전관련 기관·단체와 협업체계 구축
 - 시 연고, 모든 안전관련 기관·단체·협회에 안전관리 책임 부여
 - 활동·업무유형이 유사한 기관·단체간 안전관리 업무협약(5~10개 단체), 협약체별 핵심과제 선정·추진
 - ※ 협업대상 : 96개(기관 14, 공사공단 35, 대학교 14, 민간협회 33)
- 시 안전관리 사각 시설·주체와 「안전관리 협의체」 구성·운영
 - 공항·항만 등 정부시설은 旣 구성된 안전관리 협의체에 참여, 상시 안전관련 정보공유 및 협업 대응
 - 인천대교 등 민간시설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, 안전관리 유도
- 시민 안전문화체험·의식 확산 및 안전신고 활성화
 - 방송매체, 안전체험관 등을 활용 시민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
 - 시, 군·구 안문협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연계,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 확산
 - 가정·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자율적 안전점검 및 신고문화 정착

□ 향후계획

- 재난안전관련, 기관·단체와 협업체계 구축 : 연중
 - 안전관리의 시급성·중요성, 최근 사고 사례 등을 반영, 순차 협약
- 「안전관리 협의체」 구성 및 참여 : 상반기중
- 시민 안전문화 의식 확산 및 안전신고 활성화 : 연중

2 재난안전 정책 및 총괄·조정기능 강화

- ◇ 시 중장기 안전정책 추진목표·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 추진
- ◇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시스템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

□ 추진내용

- 「인천형 국제안전도시」 Master Plan(안) 수립 ※ 시장님 공약사항
 - 안전여건·수준 분석·진단 및 중장기 안전정책 추진목표·방향 설정
 - 재난유형·담당부서별 추진과제·지표 선정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
 - ※ 생활안전지도(8개분야) 및 지역안전지수(7개 분야) 등 정부 안전평가 과제도 포함
 - 과제별 목표·성과를 수치·계량화, 연도별 향상도 분석·평가
- 통합관제형 「재난안전상황실」 구축, 재난상황 관리 총괄
 - 현행, 오프라인 중심의 상황실을 재난감시 CCTV 및 유관기관과 연계·협력, 실시간 통합관제형 상황실로 운영
 - ※ 통합관제형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을 위한 '16년도 예산확보(910백만원)
- 재난안전본부장 주재, 시 「재난안전 회의체」 운영
 - 시 안전관련 부서장 및 안전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「재난안전 회의체」 구성·운영하여 재난안전관련 정보공유 및 협업 대응
 - ※ 운영시기 : 동절기·해빙기·개학기, 가뭄·태풍·장마 등 대책추진 직전 실시

□ 추진계획

- 인천형 국제안전도시 「마스터 플랜」 수립
 - 시 안전수준 분석·진단 및 마스트플랜(안) 마련 : 상반기
 - 부서별 추진과제 선정 및 전문가 의견수렴·확정 : 하반기
- 통합관제형 「재난안전상황실」 구축·운영 : 상반기
- 시 「재난안전회의체」 구성·운영 : 정기(분기 1회) 및 수시(필요시)

3 재난현장 중심의 대비·대응능력 강화

- ◇ 매뉴얼 정비 및 현장훈련 실시로 재난 대응능력 향상
- ◇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부문 법적의무 이행 및 자체 재난대응역량 강화 지원

□ 추진 내용

-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로 상황 발생시 활용도 제고
 -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및 재난대응수칙 정비(수시)
 - 재난대응 매뉴얼 스마트폰 앱 탑재 및 포켓용 제작·보급하여 언제 어느 곳에서나 활용·대응 가능토록 조치
 - 재난대응훈련 내실 운영으로 현장대응 역량 제고
 - 市 안전여건·사례 등을 반영한 훈련주체 선정, 민관합동 재대본 구성 및 현장훈련 실시(상반기 안전한국훈련, 하반기 자체 훈련)
 - 군·구 재난대응훈련 지도·지원 및 군·구 상호 참관, 벤치마킹으로 다양한 유형의 재난대응능력 향상
 -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부문 재난대응능력 제고 지원
 - '16.1.1부터 다중이용시설 등 자체 안전점검,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의무화
 - 위기상황매뉴얼 작성·보급 등 다중이용시설의 등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지원·확인으로 불이익 방지 및 자체 재난대응능력 향상 지원
- < 다중이용시설 자체 안전관리 의무 및 위반시 벌칙 > : 시행일 '15.12.31

- ◇ 안전점검 미실시(법 제79조) :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
- ◇ 매뉴얼 미작성·관리 및 안전훈련 미실시(법 제82조) :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□ 추진 계획

-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 : 정기(상·하반기), 수시(필요시)
- 재난안전 대비 현장훈련 실시 : '16. 5월(안전한국훈련), 하반기(자체)
-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부문 안전관리 지원 : 연중

재난대응복구과

- 1 자연재난·재해 대비 대응역량 제고
- 2 유관기관, 단체의 재난관리자원 DB 확대 구축
- 3 조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보자문관 운영(신규)

1 자연재난·재해 대비 대응역량 제고

◇ 엘리뇨 현상 등 기후변화에 따라 다양화, 대형화 추세인 각종 재난 피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, 신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

□ 기본 방침

-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 및 비상 대응역량 강화
- 현장위주의 상황파악 및 대처방안 확립
-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의한 재난 대응체계 확립

□ 추진 계획

- 재난·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
 - 신속한 기상정보 수집을 위한 「기상전문가」 확보
 - 한단계 빠른 합동 비상근무 실시 및 상황판단 회의 개최
 - 현장 위기대응 매뉴얼 수시 수정·보완 실시
- 한 눈으로 현장상황 파악 및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
 - 현장 위주의 협업훈련 강화 : 폭설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등
 - 「Cloud 현장제설 상황지도」 운영 및 내부용 폐쇄형 SNS 소통
 - 피해 예방을 위한 조기경보 체계 강화 (CCTV, 민방위 경보시스템 등)
-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
 - 군·구 민간 자율방재단의 활동역량 제고
 - 자율방재단 발대식 개최 및 단원의 교육·훈련 강화
 - 매월 「생활주변 안전순찰·정비의 날」 실시
 - 군부대, 건설기계협회, 열관리시공협회 등 협업 강화
 - 재난 복구역량 제고를 위한 응원 협약(MOU) 체결
 - UN ISDR 과 재해경감 및 기후변화에 따른 협업 추진

2 유관기관·단체의 재난관리자원 DB확대 구축

◇ 시 및 군·구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DB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DB구축까지 확대하여 재난발생시 민·관·군 간 협업을 통하여 신속히 대처하고자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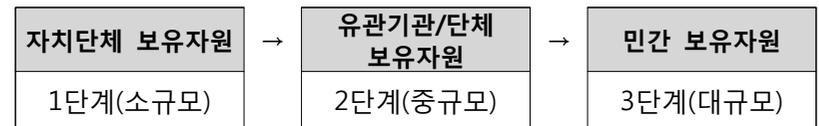
□ 사업개요

- 대상자원 : 재난복구 장비 및 자재
 - 장 비 : 덤프트럭, 굴삭기, 모래살포기 등 124종
 - 자 재 : 염화칼슘, PP포대, 의약품 등 72종
- 시, 군·구 자원 보유현황 (2015.11.19. 기준)

구 분	장 비	자 재
계	72종 16,451점	46종 9,928,733점
공동활용자원	61종 11,564점	28종 9,913,979점
개별활용자원	11종 4,887점	18종 14,754점

□ 추진방향

- 2016년까지 유관기관·단체의 재난자원 조사 및 DB 입력
 - 공사·공단 및 건설기계협회등의 보유 자재, 장비, 기술인력 DB 구축
- 유관기관·단체 비상연락체계 확립 및 자원 공동활용 훈련 실시
- 재난규모에 따른 단계적 자원 동원범위 적용



□ 향후계획

- 2017년 민간 보유자원(자재, 장비, 인력)조사

3 방재기상의 조기대응을 위한 기상전문가 확보(신규)

◇ 서해안의 전초기지인 서해5도 등 지역적 특성에 따른 신속한 기상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기상관측 장비의 품질 관리 지원 등을 위한 기상전문가를 확보하여 재난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□ 자문관 확보 개요

- 자격 요건 : 기상예보 및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
- 확보 인원 : 1명
- 확보 조건
 - (기상청) 전문가 선정 및 파견, 기상자료 및 인건비 부담
 - (우리시) 복무 관리, 근무환경 지원 (근무공간, PC등)
- 근무기간 : 년 10개월
 - 겨울철(4개월) : '15. 12 ~ '16. 3 / 여름철(6개월) : '16. 5 ~ 10.
 - ※ 서울시 및 경기도 기상자문관 기 확보 운영중(2015년)

□ 자문관의 주요임무

- 위험기상 예상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 브리핑
- 중·장기 지역단위 기상정보의 분석 및 예측정보 제공
- 방재요원에게 기상정보에 대한 활용요령 교육 및 훈련
- 군·구가 보유한 기상관측 장비의 관리 및 품질검정 지원

□ 기대효과

- 예보경험과 새로운 예보기술을 결합하여 지역 설정에 맞는 컨설팅
- 자연재해 신속한 대처 능력 향상
- 방재 담당 직원 기상 역량 강화

재 난 예 방 과

- 1 시민 안전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추진
- 2 재난 위험 시설물 안전 등급 검증제 확립(신규)
- 3 드론(Drone, 무인비행장치)과 함께 하는 과학적인 재난예방(신규)

1 시민 안전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추진

- ◇ 시민 안전 중심의 효율적 안전점검을 통한 신뢰받는 행정구현
- ◇ 주요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재난예방 대응태세 확립

□ 추진방향

- 시기·분야별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시민생활 안전도모
- 접근이 곤란한 재난발생 위험지역에 드론(무인비행장치)*을 활용한 안전예방 활동 추진 * 드론 : 비예산 사업추진(KT:업무협약)

□ 추진내용

-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구축·운영
 - 물놀이 사고예방 기반마련을 위한 사전대비 기간(4~5월) 운영
 - 대책기간(6~8월) 운영 및 상황관리체계 유지
- 초고층건축물·교량·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사고 사전예방
 - 초고층 건축물 등 대상 시설물별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
 - 피난안전구역 위치·비치 장비 목록·초기 대응반 구성·운영
- 재난위험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관리 구현
 -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현황 (2015.12월 현재)

계	중점관리시설물				재난위험시설물		
	소계	A등급	B등급	C등급	소계	D등급	E등급
4,010	3,900	1,244	2,202	454	110	108	2

- 중점관리대상시설물 및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

□ 향후계획

- 해빙기, 여름철 등 취약시기별 수시·정기 법적인 안전실태 점검
- 교량(사장교) 등의 재난 위험시설물의 위해 요인 해소방안 마련
- 관리주체, 군구 등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“민관협의체” 구성·운영

2 재난 위험 시설물 ‘안전 등급 검증제’ 확립(신규)

- ◇ 현실에 맞지 않는 재난 위험시설물 지정·관리로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
- ◇ 민·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객관성 있는 ‘안전 등급 검증제’ 실현

□ 현황

(‘15.12.20.현재)

구분	관리대상 시설수	중점관리시설			재난위험시설			
		소계	A등급	B등급	C등급	소계	D등급	E등급
계	4,010	3,900	1,244	2,202	454	110	108	2
시설물	141	140	39	91	10	1	1	
건축물	3,869	3,760	1,205	2,111	444	109	107	2

*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: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 교량 및 15년 이상 공동주택 등

□ 문제점

- 경기침체로 인한 세대별 부담액 증가로 재건축 등 사업추진 곤란
-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 등 목적으로 시설물 등급 하향조정 사례 빈번
- 분야별 (토목, 건축, 전기, 가스 등) 전문가 동시 지원이 미흡하며 전문적인 장비 없이 육안 확인 실사로 행정의 신뢰도가 낮음

□ 개선방안

현행	개선 방안
전문기관 의견수렴 후 관계기관에서 시설물 등급 부여	민·관협업(전문가 포함) 협의회 구성·운영 및 객관적 검증을 통한 등급부여

- 불합리하게 지정·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합리적인 등급 조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편의 제공
- 안전점검 용역 범위 항목 확대(전기, 가스, 기계 분야) 및 과학적 검증을 위한 전문 장비 활용 확대
- 안전관리 강화 (E급 월 2회, D급 월 1회 이상), E급 시설 거주자 퇴거 독려(권고)
- 민·관 협의회를 통한 등급부여로 민간특정시설에 대한 객관성 확보

3 드론(Drone, 무인비행장치)과 함께 하는 과학적인 재난예방(신규)

- ◇ 접근이 곤란한 재난발생 위험지역에 대해서 드론을 활용한 안전예방
- ◇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능동적·효율적인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

□ 사업개요 및 추진방향

○ (사업개요)

- 사업기간 : '16년 1월부터 지속적
- 사업주체 : 민·관협업(인천시↔KT인천지사)
- 사업내용
 - 사전예방활동, 피해조사, 대응복구 등 신속·정확한 재난정보 공유
 - 폭설, 침수피해, 해수욕장(피서객 안전사고 예방) 재난영상 정보제공

○ (추진방향)

- 드론은 인적, 물적 사고 가능성이 적은 해상지역 중점 활용
- 도시안전분야의 계측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안전분야 관리
- KT와 업무협약을 통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

※ 드론



- 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
- 카메라, 센서, 통신시스템 탑재
- 고공 촬영, 재난현장조사, 산불예방 등 활용

□ 향후 추진계획

- '16. 1. ~ 3. : 국토해양부(지방항공청), 국방부 등과 가능지역 협의
- '16. 4. ~ 6. : KT 인천지사와 재난통신 업무협약 체결
- '16. 7. ~ 10. : 드론운행 테스트 검증(시범운영)
- '16. 11. ~ 12. :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·조사 등 활용

특별사법경찰과

① 먹거리 및 생활환경 안전도시 조성

② FTA 확대에 따른 특사경 활동 강화

1 먹거리 및 생활환경 안전도시 조성

◇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먹거리 및 생활환경 침해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인천 건설

□ 특별사범경찰 현황

- 조직구성 : 1과 3팀 24명(군·구 파견 2명 포함)
- 지명분야 : 8개 분야(식품, 환경, 공중위생, 원산지, 수산, 약무, 개발제한구역, 청소년)
- 운영실적 : 형사입건 338건(2015. 12. 17. 기준)

□ 2016년도 3대 중점 추진사항

-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불법 식자재 제조·유통 행위 근절
- 야식배달 등 관리가 취약한 다중이용 음식점 불법 행위 단속
- 수도권매립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기획수사 강화

□ 세부 추진계획

- 먹거리가 안전한 도시건설을 통해 인천의 가치제고
 - 학교 및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구조적 부조리 요인 사전 차단
 - 야식업소 등 단속 취약업소에 대한 기획수사 확대
 - 차이나타운, 어시장 등 인천의 먹거리 대표지역 관리 강화
- 환경오염 취약지역 관리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
 -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준수 및 중간 폐기물 처리업 수시 단속
 - 시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주택가 주변 비산먼지, 악취 등 공해발생 사업장 집중 단속
 - 과거 위반자 모니터링 및 추적조사 강화로 재발 방지
-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및 관계기관 건의
 - 미등록 식품제조업(새우젓, 액젓 등) 관계기관과 협조 등록 추진
 - 그린벨트 훼손, 무신고 음식점 등 반복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건의

2 FTA 확대에 따른 특사경 활동 강화

◇ 한·중 FTA 발효 등으로 증가할 수입식품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

□ 추진방향

- 수입식품의 국산둔갑 등 불법행위 철저 단속으로 시민건강 보호
- 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장 등 관리감독 사각지대 단속 강화로 인천의 관광이미지 제고
- 원산지 도용행위 등 강력 단속을 통해 지역특산물 보호

□ 세부 추진계획

- 수입식품 등의 불법행위 근절로 시민건강 보호
 - 대형 농·수산물 수입판매상의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
 - 물류단계의 박스같이 등 원산지 위·변조 행위 철저 단속
 - 소분업 등 수입식품 취약지대에 대한 기획수사 확대
- 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점 등 단속 강화로 인천의 이미지 제고
 - 유통기간 경과제품 등 불량제품 판매행위 금지
 - 제품관련 정보 미표시 등 출처불명의 저질제품 판매 근절
- 원산지 관리 강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권익보호
 - 국내 생산지 변경행위 단속으로 지역특산물 생산자 보호
 -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착각유발 혼동표시 등 철저 단속
 - 명절 등 수요급증 시기 집중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
- 특사경 직무분야 확대로 상표권 보호 등 취약분야 단속 강화
 - 특사경 직무분야에 착통제품 단속 등을 위한 상표권분야 확대 추진(현재 8개 분야 → 9개 분야)

비상대책과

1 접경지역 통합방위 비상대비태세 강화

1 접경지역 통합방위 비상대비체제 강화

◇ 접경지역(강화군, 서해5도) 사태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통합방위를 통한 비상대비체제를 확립하고자 함.

□ 평시, 위기대응 태세 강화

- 시민과 함께하는 위기대응능력 향상 훈련 강화
 - ※ 재난대비훈련(5월), 을지연습(8월), 민방위 지역특성화 훈련(분기별) 등
- 접경지역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: 대피시설 5개소 신축
 - 민통선 이북·대북확성기 설치 지역 중심 신설(강화 교동면 등)
- 접경지역 다중경보발령장치 구축 : 5개소
 - 전국 최초 다중경보발령시스템을 설치, 접경지역 읍·면장이 관내 다수(2개 이상) 경보시설 동시 발령
- 국지도발 단계별 위기대응반 운영 : 1단계 ~ 3단계

□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

- 전시동원능력 유지를 위한 군부대와의 지속적인 협의
 - 중점관리 지정업체 현황 : 7개 분야 268개 업체
- 국민안전처, 국정원 등과의 정보공유 및 상황 전파
 - 국가지도통신망, 비상연락망 최신화, Hot-Line(19회선) 상시가동 유지 등
- 지역 민간단체를 통한 대시민 홍보 강화로 안보의식 고취
 - 軍 무기전시, 안보사진전, 추억의 주먹밥 시식 등 시민 참여 유도

□ 유사시, 주민대피 및 보호 실시

- 상황발생 초기 대피소에 주민들 우선 대피
 - 신속·정확한 경보전파체제 확립 / 대피책임자 지정으로 체계적 주민대피
- 주민 이동명령 하달 시 육지로 수용 및 구호 조치
 - 수용시설(체육관 등) 적정 확보 / 수용 및 구호 계획 일치(인천시 ↔ 군·구)
- 해상이동 시 유관기관 협조 주민이동 지원
 - 선박에 의한 이동 시, 주민 통제·보호 우선 실시(해경/해군 협조)
- ※ 「북한군 침투·도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」 최신화 유지